

#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수용”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민주당 최고위... “일정 소득 이상은 70~80%, 고소득층엔 매칭지원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서 재발의... 대통령 거부권 남발, 권한 남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반드시 전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정부에서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등지원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일

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겐 정부가 100%를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겐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렸다”며 “민주당은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 하나”라며 “최선을 다해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尹-이종섭 3회 통화, 수사 외압 스모킹건”

정청래 “제2 태블릿”... 박주민 “대통령 전방위 수사 압력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를 지켜보지”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맞섰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PC’에 비유하는 발언, 해당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통화 사실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적노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도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아니냐.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니냐.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니냐”며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절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

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원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놀랄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 그렇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결 무산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여당을 향해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은 막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보도 관련 질문에 “제가 그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민형배, 319개 법안 발의 ‘21대 국회 1위’

51개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 국회의원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



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민 의원을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2년 연속),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담 우수의원 등으로 수상했다.

민 의원은 “제정·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송구한 마음뿐”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은 물론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국회의장 경선, 당원투표 20% 반영”

‘당원주권국’ 신설·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당원 표비중 3배 상향

## 당헌·당규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시 당원투표 20% 비율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치러진 22대 국회 상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 패하자 당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소개했다.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의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할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또한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동시에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계기로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의 위상을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위로 바꾸고, 후보자로서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이다.

지난 총선 당시 당 검증위원회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천 신청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적잖은 논란을 양산했다.

이 때문에 검증위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격 심사하고 후보자 적격 여부는 공천위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부적격 심사 기준 중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 규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구 경선 후보가 3명 이상 일 때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후보 등록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나오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다음, 당무위와 최고위의 결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